

한국의 농업과 농자재에 대한 단상

농자재 사용으로 인한 공과 과 중 어느 한 쪽만 취하기는 어렵다.
이 시대 이 땅에서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민할 사안이지
어느 한 쪽으로 함부로 말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증산농정으로 야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운 공까지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 현 석
전 곡성군수

우리에게는 1960년대까지도 빈곤과 기
아의 시대였다. 농업이 주된 산업의 지위
를 차지한 농업사회였지만, 굶주림을 해결
하지 못했다. 당시 한국농업의 특징으로
영세소농, 생계농, 가족농, 미맥 위주의 무
축농업 등을 줄줄이 외던 기억이 새롭다.
농사의 풍흉이 나라살림과 민심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농업생산의 안정
과 증산이 농정의 핵심적 목표일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증산농정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 자신, 특히 농업과 농
업인들이 대견스럽고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 손바닥만 한 땅에서 주곡인 쌀의 자급
을 달성하고, 형제자매와 자녀들을 교육시
켜 산업인력으로 내보내며, 산업화를 위한
외자의 도입에 대충자금으로 요구되는 내
자를 조달해 낸 것이다. 증산농정이 이를
뒷받침 했다. 통일벼를 비롯한 종자를 개

발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증투하며,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시설농업과 축산을 장려하였다. 그 결과 주곡인 쌀의 자급을 달성하여 녹색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과일과 고기와 우유를 생산하며, 시설농업에서 사철 채소가 생산된다.

필자는 겨울상추를 먹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뻐다. 연산군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즐긴다고 우쭐했었다. 지금도 여전히 소농의 가족농이 주축이지만 생계농이 아닌 상업농이며, 쌀농사는 전체 농업소득의 절반이 못된다.

주곡 이외에도 다양한 농업생산물이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 농업이 이를 감당해 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져서 소비시장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녀 각각 80세 전후로 늘었다.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는 두보의 시구가 널리 인구에 회자되던 시절이 마치 먼 옛날인 듯 착각에 빠진다.

이와 함께 현대의 선진제국에서 논란되는 비만과 고혈압, 당뇨 등의 이른바 성인병과 화두로 부상한 환경과 생태가 우리나라에서도 큰 관심거리로 등장하였다. 그것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영세소농이 주축을 이루는 농업사회였던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화사회로 발전한 압축성장의 사회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이런 와중에 비료와 농약을 둘러싼 논란도 심심찮게 제기됐었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와 잔류농약으로 인한 건강위험 우려가 대표적이다. 논란이 심할 때는 마치 비료와 농약과 증산농정이 잘 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 분위기에 휩싸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 꼽힌다. 벌거숭이산에 산사태를 막기 위하여 아카시아 씨를 뿌리고, 척박한 땅에서 빨리 잘 자라는 리기다소나무를 서둘러 심었다. 구공탄이 나무를 대체하는 연료로 보급되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산이 푸르러졌다. 지금은 나무가 너무 뻣뻣해서 숨을 쉬기 어려울 지경이라 속아내는 일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와중에서 이른바 경제수종이 거론되더니, 어느덧 아카시아와 리기다가 천대를 받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런 수종을 심었던 것이 단견이었다는 비난까지 등장했다.

또 먹을 것은 모자라는데 인구만 급속히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에게 우리나라는 일찍이 산아제한을 통한 인구조절에 성공한 모범국이다. 그런데 갑자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여 과거와는 정반대의 인구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면서, 과거의 산아제한이 단견이었던 것처럼 비판을 받기도 한다.

증산농정, 산림녹화, 산아제한 정책처럼 분명 우리사회의 필요에 부응하여 성공을 거둔 정책들로 보이는데 하루아침에 비판

과 비난의 골짜기로 추락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그때마다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애시 당초 잘못된 정책이었던가? 그 목표도 성과도 바람직하지 못했더라면 말인가? 이런 종류의 논란에 대해서 비료와 농약을 중심으로 찬찬히 살펴 보고 싶다.

‘극단·이분법적 사고’에 경종 울려

비료와 농약이 농산물의 증산에 크게 기여한다. 농산물 증산은 기아를 면하게 해 준다.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가 없어진다. 그만큼 오래 건강하게 산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우리가 체험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농업분야에서 생산보다 유통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만큼 국내의 농산물 생산이 늘고,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외국의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 오면서, 농산물은 공급과잉이 되는 한편으로 식생활의 서구화가 진전되었다.

이제 기아의 문제는 가고,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농산물 내지 식품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과거보다 안전과 건강에 더 소홀해서 문제가 생겼다가보다는 과거에는 우선 허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인지라 건강을 챙기거나 안전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친환경농

업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건강에 좋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은 개방 농정의 시대에 우리 농업이 맡아주어야 할 사명임과 동시에 존립해야 하고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유기농업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친환경농업 실천이 있었다. 그런데 증산농정의 시대에는 농촌진흥청의 연구 대상에서 벗어난 무관심의 정도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천대와 압박을 받았다.

그런즉 시대가 필요성을 인정했을 때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의 실천을 공인해 주는 것이었다. 시대의 변화를 내다 보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정도를 넘어서 이미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증산농정의 틀을 너무 늦게까지 고수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출산을 장려해야 할 만큼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산아제한 정책을 고수했던 인구정책과 참 많이 닮았다. 비판의 대상이 될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증산농정과 산아제한정책이 전적으로 틀렸거나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따져보면 오늘의 고민은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이른바 배부른 고민이다. 배부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배고픈 고통을 해결해 준 증산농정과 산아제한정책의 공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비료와 농약에 의한 농산물생산이나

한국의 농업과 농자재에 대한 단상

인위적인 인구조절을 철저히 반대하는 생각과 실천이 존재한다. 이것은 인생관, 세계관에 연관되는 가치관, 다시 말하면 철학의 영역이다. 가치관은 종교적 신앙과 같아서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한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동시에 남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비료와 농약을 써서라도 농산물을 되도록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지배적인 가치관(철학)이 달라지면서 보편적인 지식, 즉, 상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우리나라는 비료와 농약의 과용이 문제여서 그 사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북한은 아직도 비료와 농약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도 국민의 영양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가? 아마도 가장 부자나라인 미국이라는 국가만을 따로 떼어내서 본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비료와 농약이 인류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건강을 해치는 과가 모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서 어느 한 쪽만 취하기는 어렵다.

이 시대 이 땅에서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민할 사안이지 어느 한

쪽으로 함부로 말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농업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아직도 그 폐단이 심하게 남아 있는 '전부 아니면 전부'의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와 논쟁에 대하여 반성거리를 제공해 주는 가장 쉬운 사례가 아닐까 싶다.

증산농정으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 해결책을 찾아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증산농정의 제1목표로서 뚜렷한 성과를 올린 농산물의 증산이 세운 공까지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기여한 비료·농약을 비롯하여 비닐 등 농자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증산보다 안전이 더 우선시되는, 적어도 비료의 과용과 농약의 오남용만은 용납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금 돌이켜 생각할 때, 증산농정도, 산림녹화도, 인구조절도 좀 더 일찍 그 정책의 역풍을 예견하고 미리미리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시작에는 늦는 법이 없다고 했다. 미리미리 준비했다더라면 좋았겠지만, 뒤늦게 출발했다더라도 일단 출발을 했으면 부지런히 뒤쫓아 따라잡고 앞서온 경험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다. 비료와 농약을 비롯한 농자재 분야에서도 생태와 환경의 시대에 적응하는 노력들이 이미 시작되었기에, 그 눈부신 발전을 기대해 본다. Y